

‘친명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맹활약 예고

제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맹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2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남 민주당이 의욕적으로 출범시킨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의 단장과 간사 등에 광주·전남 출신 친명계 국회의원·당선자가 다수 포함됐다.

실제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는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13명 중 단장과 위원을 포함해 친명계 광주·전남 의원·당선자가 5명(38.5%)이나 합류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특별대책단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단장의 중책은 재선의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특별대책단 산하 사건조작 진상조사팀장 역시 재선의 주철현 의원(여수갑)이 맡았다. 이 둘 두 사람은 광주·전남에서 ‘원조 친명계’로 분류된다.

또한 특별대책단 간사는 그동안 이 대표의 검찰발 사법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대응해 ‘이재명 호위무사’란 별칭을 얻기도 했던 박균택 당선자(광주 광산갑)가 선임됐다.

대책단은 또 수원지방검찰청의 ‘술관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된 범국민적인 제보를 받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할 방침인데, 제보센터 운영은 이 대

‘정치검찰 특별대책단’에 의원·당선자 5명 포함 단장 민형배·팀장 주철현·간사 박균택 등 맡아

“지금껏 검찰 정상화 골든 타임…전면 대응”

표 특보를 역임했던 김문수 당선자(순천·광양·곡성·구례갑)가 담당하게 됐다.

이 밖에 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양부남 당선자(광주 서을)도 특별대책단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출범식에서 “4월10일 총선은 한마디로 검찰독재정권 심판이었다. 대책단의 목표는 정치검찰의 발본색원”이라며 “지

금 이 시점을 ‘검찰 정상화 골든타임’으로 보고 전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법한 사실을 짚어 관련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도 추진할 것”이라며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의 밑거름을 삼겠다.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시민을 위한 정부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팀장을 맡은 주철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진술로 촉발된 ‘검찰청 술파티 사건 조작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의혹이 진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게 대한 탄핵 및 형사처벌과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까지 맡게 된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반인권적 회유, 압박을 통한 사실 왜곡과 사전 조작을 밝혀내겠다”고 의욕을 감추지 않았다.

박균택 간사는 출범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기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진상 조사가 이어지겠지만 그동안 검찰이 보여왔던 여러 부당한 행태들, 예를 들어 과잉 소환이나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 반복

행위 그리고 야당 대표를 정치적 사냥물로 삼아서 수사권을 남용한 행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조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수감돼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결심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가 가져온 언어 회 등을 먹고 소주를 마시며 검찰로부터 진술 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은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진수기자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직회부

국민의힘 불참 속에 찬성 15표로 의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부위에서 단독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정부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2개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가맹사업법의 경우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일반적으로 처리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운동권 셀프 특별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2개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만약 30일 이내 합의가 안 되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연합뉴스

조국당, 교섭단체 가능할까…‘20석 충족·요건 완화’ 모두 난항

시민사회 당선인 변수에 민주당의 총선 전 ‘요건 완화’ 공약도 변화 조짐

4·10 총선을 통해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얻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8석을 더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은 데다, ‘20석’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려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인을 배출한 군소정당, 시민사회 측과 손을 잡아야 한다.

진보당 (정혜경·전종덕·윤종오)과 새로운미래 (김종민), 새진보연합 (홍혜인), 사회민주당 (한정민), 시민사회 (서미화·김윤) 등이다.

이들 정당 및 당선인들과 합당 혹은 입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의원 모임’ 형식으로 공동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것

이다. 20대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14석)과 정의당 (6석)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으로, 민생당 (18석)과 무소속 의원 3명이 ‘민주통합 의원모임’으로 각각 공동 교섭단체를 꾸린 전례가 있다.

이 가운데 진보당,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이 강하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민주연합에 합류해 당선인 2명을 배출한 시민사회 측은 이 방안이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측 후보 추천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23일 “당초 민주연합 합류 취지는 총선 후 무소속 방출이 었다”며 “조국혁신당으로 가는 것은 당위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의 경우 조국혁신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지금은 당내에서 총선 평가가 진행 중이다. 진로 문제는 총선 평가를 끝낸 뒤에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완화하는 등 관련법을 고치는 방법도 있지만, 그 가능성도 점차 낮아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총선 전인 지난달 27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정치개혁 정책으로 내놓았지만, 총선 후 당내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현재 군소정당이나 시민사회 측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무리하지 않고서 22대 국회가 본격 개원한 뒤 달라지는 정치 지형을 지켜보며 적당한 때를 기다린다는 전략이다. /연합뉴스

국회의장 후보들 연일 ‘강성 발언’

더불어민주당 내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 후보들이 연일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주목된다.

다수의 다선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 당내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친명(진이재명) 일색인 강경 성향 의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란 관측이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 (그 토대를) 깔아줘야 된다”고 말했다.

당내 최다선인 6선 고지에 오른 조정식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성공을 제대로 만들어 국회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6선에 성공한 추미에 당선인은 “지난 국회에서 각종 개혁 입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지당한 데다, 제때 (입법을)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성찰도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에 중립은 없다”며 “정치는 ‘가장 약한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